

'박원순 청문회' 될까...오늘부터 여야 충돌 불가피

통합, 피고소사실 유출 경위 집중 공략 예고...靑 조준까지

민주, 방어 예정...“진상조사 결과 지켜보자” 유보적 입장

국회가 20일 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여야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싸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열리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은 청문회를 사실상 '박원순 청문회'로 삼는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이 피고소 사실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집중 공략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박 전 시장이 피고소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결국 그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만큼, 통합당은 이 고리를 최대 쟁점으로 삼으면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청와대와 여당까지 정조준하는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김중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이 사전에 (박 전 시장의 피고소 사실을) 청와대에 알려줬는지 분명하게 대답해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성범죄에 대한 조사 사실을 누가 박 전 시장에게 전달했는지, 경찰이 보고를 청와대에 전달했는지 여부”라고 거듭 강조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박 전 시장의 피고소 사실이 전달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권의 잘못된 버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청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관련 의혹을 밝히겠다고 경찰과 서울시 측 인사 11명을 김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으로 추가 채택해달라고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신청한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여성청소년과장, 서울시청 과건 정보과 협력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여성권익담당관, 인권담당관, 비서실장, 센터특보 등이다. 증인 채택이 거부되자 이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 접수 건이 유출된 경위를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요구에 정부와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가 '박원순 청문회'로 번지지 않게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청와대는 경찰로부터 박 전 시장의 피고소 사실을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서울시에 알리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꾸리는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오는 22~24일 예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 청문회장이 마련돼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박원순 전 시장 피소 시선 유출 의혹 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된 대정부질문도 개원 이후 여야가 본격적으로 격돌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낙마 0순위' 박지원...주호영 “적과 내통하는 사람”

통합당, 인사청문회 중 국정원장에 화력 집중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55주기 추모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20일) 경찰청장부터 앞으로 (인사청문회) 여러 명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으

로 적을 추적하고 정보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해야 한다”며 “그러나 적과 친분관계에 있는 분이 과연 국정원을 맡아서 되는 건지 전문성이 있는지부터 따질 예정인데, 일단 우리는 박 후보자가 국정원에 파견가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박 내정자가 통일부장관이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며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보기관에 적과 내통하는 사람을 임명한 그 개념부터



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현역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한 과정 등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액후원자 A씨에게 5년전 빌린 5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박 후보자가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5년 8월 A씨에게 5000만원을 빌린 뒤 지금까지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고 있다.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는 연 5.56%의 이자로 매월 27일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박 후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돼있다.

민주, 내년 보궐 공천에 무게 “내지 말잔 사람 없어”

이원욱 “새 지도부와 협의”...노용래 “지금 예단 못해”

김종민 “참정권 훼손”...이재정 “멋진 후보 내 책임져야”

서울·부산 시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내년 재보궐 선거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두 광역단체장의 성추행 의혹이 재보선의 원인이 된 터라 후보 공천 여부를 두고도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차기 당 지도부 임성을 노리는 의원들은 선불리 서울·부산 시장 후보 공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있다.

19일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원욱 민주당 의원(3선·경기 화성시)은 재보선 후보 공천 여부와 관련해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어떤 게 공정하고 내로남불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새로이 이어가겠다”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긴밀하고 긴요하게 협의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만 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당의 대처 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낸 이 의원이지만 후보 공천만큼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워한 다.

최고위원 출마를 준비 중인 다른 의원들도 이 의원과 비슷한 입장이다.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한 노용래 의원(4선·서울 마포구갑)은 뉴스1과 통화에서 “당헌·당규 상에 (후보 공천에 대한) 제약 요건이 있다. 당헌·당규를 무시할 순 없다”면서도 “당이려는 건 당원들이 주인이니 당원들의 의견,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다 감안하고 존중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지금 예단하거나 속단할 수 없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재선·충남 논산 계룡읍)도 통화에서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의 일관성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면서

도 “근본적으로 정당의 공천은 유권자들의 참정권에 영향을 미친다. 공천을 안 하면 주권 행사를 훼손하는 게 될 수 있어 그런 점을 잘 판단해 당원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발언이 조심스러운 것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제96조2항)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의 길목에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당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후보 공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후보를 내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이재정 의원(재선·경기 안양시등안구)은 지난 17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내년 재보궐 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한다는 질문에 “국민이 신뢰할만한 멋진 후보를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한근석 전남도의원, 상임위 활동 집행부 견제

전남도의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열린 제34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획조정실 등 17개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집행부 활동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한근석 의원은 광주전남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전국 상위 수준의 연봉을 받고도 연구보다는

외부활동에 취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미래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전남 위기청소년의 광역 사회 안전망인 ‘청소년전화 1388’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